

저출산 원인과 정부 대처

황정욱(연합뉴스 기자)

인구 비상이 걸렸다.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인구 위기론'이 강력 대두되고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은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재난적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만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심각한 사안인데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현상이 더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1993년 1.67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47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전세계 평균인 2.69명에 비해 절반도 못되는 수준이고, 선진국 평균인 1.56명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한국인구학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을 1.2명으로 가정할 경우 2015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해 2300년에는 전체 인구가 31만명이 된다.

그러면 이같은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자녀 양육 부담이 꼽힌다. 세 자녀는 커녕

두 자녀도 낳아 기르기가 어려운게 엄연한 현실이다. 월평균 자녀 양육비가 132만1천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이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6.6%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교육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자녀가 두명이면 양육비 비율이 60.7%로 올라가고 세명이면 69.7%, 네명이면 72.6%나 된다. 다시 말해 두명 이상의 자녀를 낳으려면 수입의 대부분을 집어 넣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사회의 트렌드 변화도 한몫하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非婚)이 유행이다. 여성 10명중 4명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쪽이다.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꼭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도 '올드 패션'이다. 10여년 전만하더라도 90% 이상이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지금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다 ▲초혼 및 출산 연령의 상승 ▲독신 남녀 증가 ▲이혼 급증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도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각에선 혼외(婚外) 출산을 터부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할 시점이 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둘이서 자녀 둘을 낳자는 ‘둘둘 플랜’도 여기서 나왔다.

정부는 지난 9월말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에는 정부위원인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인 관계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아직도 중·장기 기본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일단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유·사산 휴가제 도입과 보육료 지원 확대, 산전·후 휴가 급여의 전액 정부부담 등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산(多産) 가구에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다 자녀 가구에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 시술비 지원,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 취업모를 위한 시간 연장형 야간 보육서비스 제공, 출산 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두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확대 등도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규모는 아직 정확히 산출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으로는 대략 2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조세 구조를 바꿔야 할 지 모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목적세 신설 등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도 정부 고위층에서 제동이 걸렸다. 아동의 안전 관리 및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보다 종합적인 매머드형 계획을 짜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내년 3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점을 저출산 정책 가동의 출발점으로 잡고 있다. 그 때쯤 되면 정책의 윤곽이 개략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으나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킬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간과 돈을 갖고 단계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